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53-2호)

# 여론속의 **어 (보) (보) (보) (보)**

기획: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연대의식

2021. 10. 29.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u>파악하고자 합니다.</u>
-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u>연구진</u>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O與民論

####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연대의식



#### 주요 결과

-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침투한 지 1년 반이 훌쩍 지났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때가 되었다.
-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 시작에 앞서, 그동안의 방역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시민이 획득한 자산인 연대의식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재난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생각하고 믿게 되었을까?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코로나19 방역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그리고 방역의 대전환을 앞둔 지금 이 시점의 조사결과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 '나'와 '이웃'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의료계, 방역당국, 행정기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도 높았고, 민간기업과 청와대에 대한 평가도 좋았다. 다만 종교계와 정치권, 언론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작년 3월 조사에 비해 높아졌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다는 응답은 과반 이하로 낮았으나. 이 역시 작년 3월 조사에 비하면 높아졌다.
- 정부가 코로나19 필수 직업군에 대해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10명 중 9명이 간호사,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노인볼봄 종사자, 보건·의료·소방분야 공무원 처우개선에 동의하였고, 환경미화원, 보육교사, 여객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구직자 등의 손실을 정부가 크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다. 이는 작년 11월에 비하면 15~20%포인트 증가한 결과이다.



#### 코로나19. 우리는 같이 극복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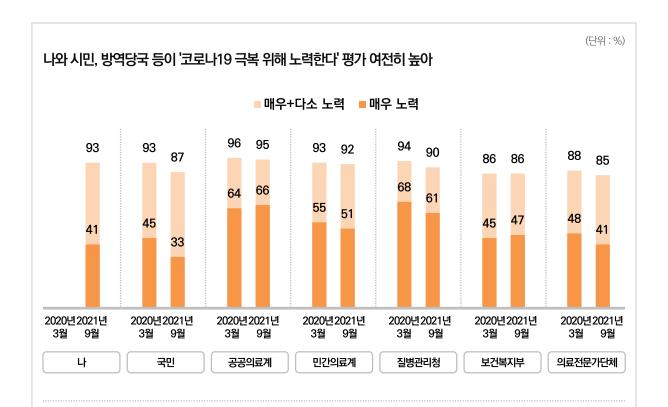
#### 나와 시민, 방역당국 등이 '코로나19 극복 위해 노력한다' 평가 여전히 높아 종교계, 정치권, 언론이 '코로나19 극복 위해 노력한다' 응답은 절반 이하

코로나19와 같은 전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대의식이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재난이 닥쳤을 때,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연대의식이 발동한다.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도 연대의식은 빛을 발했다. 초기 확산세가 심했던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보냈고, 마스크 대란이 닥치자 마스크 5부제에 동참하며 불편함을 감수하였다. 코로나19 방역전쟁이 1년 반을 넘겨 피로감이 누적된 현재 시점에서도, 이러한 연대감은 유지되고 있을까? 사회 각 구성원 모두가 방역전쟁에 충분히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와 우리 국민, 그리고 주요 정부기관 및 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한국리서치는 코로나19 1차 유행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던 작년 3월 13일 ~ 16일에도 동일한 문항을 물어본 적이 있다(https://hrcopinion.co.kr/archives/15309),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여론은 어떻게 변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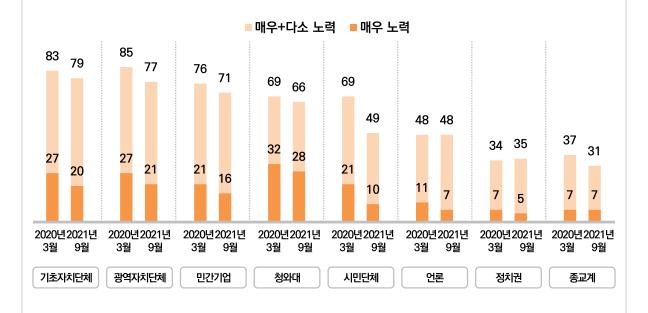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93%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도 87%로 높았다. 나와 내 이웃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연대감은 굳건했다.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일까? 의료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도 90%를 넘었다(공공의료계 95%, 민간의료계 92%). 작년 3월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우 높은 믿음이다. 질병관리청(90%), 보건복지부(86%), 의료전문가단체(85%) 등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기관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믿음도 매우 높다. 기초자치단체(79%)와 광역자치단체(77%) 등 행정기관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80%에 달했다. 이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민간기업 역시 노력하고 있다는 평이 우세하고(71%), 청와대 역시 응답자의 66%가 노력하고 있다고 평했다. 모두 작년 3월 조사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결과로,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보여주었고, 또 쌓였던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에 미치지 않는 낮은 평가를 받은 집단도 있다. 종교계가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작년 3월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31%로 조사대상 중 가장 낮았다. 정치권(35%), 언론(48%) 역시 작년 3월과 큰 차이 없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시민단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작년 3월 조사에서는 69%로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떨어졌다.



#### 종교계, 정치권이 '코로나19 극복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는 낮아



질문 : 다음 각 사회주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나" 에 대한 평가는 2020년 3월 조사에서는 묻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03.13~16 / 2021. 09.10~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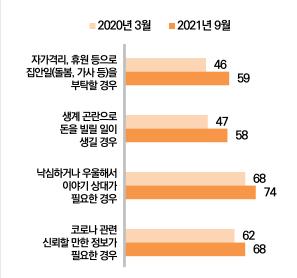
#### 도움을 받을 사람과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다는 응답, 작년 3월에 비해 높아져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지도 연대의식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복지시설, 종교기관 등이 나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는 공동체의식, 서로 이어져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연대의식도 높아질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작년 3월 조사에 비해 높아졌다. 자가격리나 휴원 등으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일 때(46%→59%), 생계 곤란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47%→58%),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68%→74%),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응답이 6~13%포인트 높아졌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다는 응답은 과반 이하로 낮았으나, 이 역시 작년 3월 조사에 비하면 7~8%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변 사람과 공적 기관의 지지 또한 높아진 것이다.

####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 작년 3월보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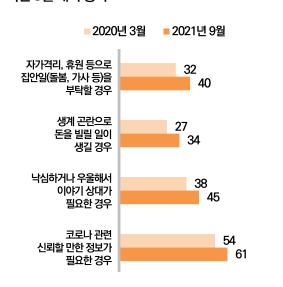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03.13~16 / 2021. 09.10~13

####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요청할 기관 있다는 응답도 작년 3월 대비 증가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03.13~16 / 2021. 09.10~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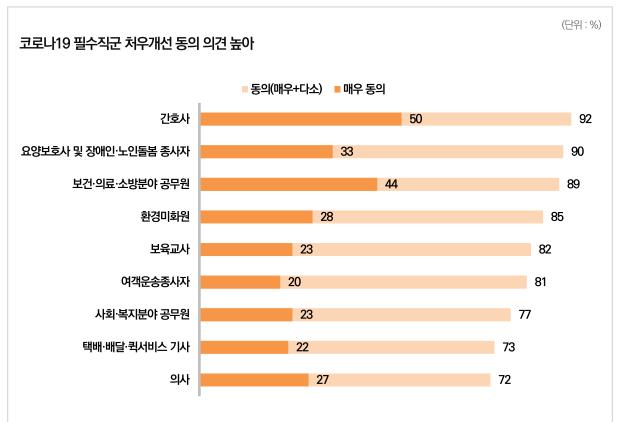


### 코로나19 필수직군의 어려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 간호사, 돌봄종사자, 보건·의료·소방분야 공무원 처우개선 동의 응답 높아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통해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염 위험을 줄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근무, 혹은 이전보다 더 힘들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 직업군들이 있다. 이들 직업군의 어려움을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까? 정부가 이들 직업군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직종 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처우 개선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정부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92%가 동의하였고,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노인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역시 90%가 동의했다. 보건·의료·소방분야 공무원(89%), 환경미화원(85%), 보육교사(82%), 여객운송종사자(81%)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80% 이상이 동의하였고, 사회·복지분야 공무원(77%), 택배·배달·퀵서비스 기사(73%), 의사(72%) 역시 다수가 처우 개선에 동의하였다.



질문: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각각의 대상에 대해 처우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1. 09.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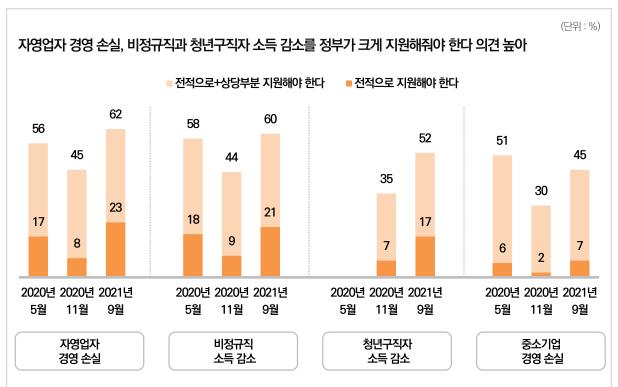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 필요한가?

#### 자영업자 경영 손실, 비정규직과 청년구직자 소득 감소를 정부가 크게 지원해줘야 한다 의견 높아

코로나19 극복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서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 경제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가뜩이나 적었던 취업의 기회마저도 더 희미해진 청년구직자들이다. 정부가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할까? 해 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 해 줘야 할까? KBS와 시사인, 한국리서치는 작년 5월과 11 월 동일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068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30). 작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에는 정부가 이들의 손실을 전적으로, 혹은 상당부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11월에는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이들의 손실을 크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경영 손실을 전적으로, 혹은 상당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작년 11월 45%에서 이번에 62%로 높아졌다.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44%→60%), 청년구직자의 소득 감소(35%→52%)에 대해서도 정부가 크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이들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 정도로 가시화되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진 것이다.



질문: 코로나19로 인한 다음 사회 각 부문의 손실과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청년구직자 지원" 지원에 대한 평가는 2020년 5월 조사에서는 묻지 않음

응답자 수: 2020년 5월 조사: 1,000명 // 2020년 11월 조사: 1,050명 // 2021년 9월 조사: 1,000명

조사기간: 2020, 05.07 ~ 08 // 2020, 11.23 ~ 25 // 2021, 09.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얻은 높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 시민·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중요한 자산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당위적인 태도 때문일 수 있기에, 후속 조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높아진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실제 정책 집행 과정, 예를 들면 피해 직종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와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에서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재난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유지되다 사라지지 않게, 장기간 내재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이후의 과제이다.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8월 기준 약 63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9,254명, 조사참여 1,50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0.8%, 참여대비 66.7%)
조사일시	• 2021년 9월 10일 ~ 9월 13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여론속의

### o 興 론論



Hankook Research